

다산포럼

사드, 우리의 국익을 묻다



김 태 희
다산연구소 소장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파악된다. 2014년 6월 3일, 커티스 스캐퍼토티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 한반도 배치’를 공개적으로 발언하기 이전이다. 2013년 4월 방위사업청과 공군 관계자들이 사드 제작사인 미국의 록히드마틴사를 방문해 사드 관련 비밀 브리핑을 받았다. 이 사실이 그해 10월 언론에 보도되면서 미국의 MD 편입 논란이 제기되었다.

사드는 대북(對北) 견제용인가, 대중(對中) 견제용인가? 현재 알려진 사드의 효용은 요격 기능보다 레이더 기능이 주목된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으로는 하점이 많이 지적된다. 오히려 중국을 근접 감시하는 X밴드 레이더의 기능이 위협적이다.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응하여 추진되는 모양새였지

만, 사드는 일차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용이라고 봐야 자연스럽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에 대한 협력과 견제 사이에서 고민해 왔다. 우리 또한 그러한 양국 관계 속에서 전략을 고민해 왔다. 오바마 정권은 2011년 11월에 중동과 유럽에서 아시아로 초점을 옮기는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중국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대중 견제 전략을 본격화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중국에겐 심각한 위협이요, 중국의 주변국에겐 딜레마다. 주변국은 미국의 도움이 반갑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망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우리에게도 곤혹스러운 형태로 나타났다. 한·미·일 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 위안부 합의 등이 추진되었는데 우리 국민의 정서에 어긋났다.

미국의 리더십에 의문은 없는가? 미국은 소련 붕괴 이후 유일한 슈퍼파워로 존재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을 정점으로 하여 미국의 권위는 점차 하락 추세다. 아시아 회귀 정책으로 중동과 유럽에서 아시아로 초점을 옮겨 보지만 여의치 않다.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일으킨 이라크 전쟁은 중동을 불안하게 하고, 유럽에 테러를 확산시키는 결과

가 되었다.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으로 이뤄진 사드 배치가 과연 총체적으로 우리의 국익에도 도움이 될지 판단해 보아야 한다. 우리의 국익이 미국의 국익과 반드시 일치할 것인가? 아닐 것이다. 동맹국이 요구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닐 것이다. 일방적 의존과 추종만이 답은 아니다. 동맹임을 내세워 모든 판단을 유보할 수는 없다. 우리도 주권국가로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가끔은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동맹국으로서의 효용도 높아질 것이다.

이번 사드 배치 결정으로 미·중의 군사적 대립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미국에 줄을 엮음을 보여 주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반발하고 양국 정상은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를 공동으로 발표하며 더욱 가까워진 모습이다. 북한의 핵 역지를 위한 다자 간 협력 체제가 금방 ‘미·일·한’대 ‘중·러’의 신냉전 구도로 바뀌어 버렸다. 게다가 북한으로선 군사주의가 힘을 받고 외침이에서 벗어나 우군까지 얻게 생겼다. 사드 배치의 최대 수혜자가 북한이라니.

냉전 종식 후 그동안 우리가 공들여 왔던 남북관계의 개선은 후퇴하고, 강경론을 틈타 어느새 한반도에 원심력이 강하게 개입할 여지를 주어버렸다. 개성공단

의 폐쇄가 남북관계의 옵션을 제한시켜 버렸다면, 이제 사드 배치는 주변국과의 관계에서의 옵션을 배제해 버릴 것이다. 둘 다 목소리만 큰 자재적 조치로 귀착될 공간이 크다.

전자과 유해성 논쟁이나 중국의 경제 보복론은 차라리 한가해 보인다. 국익과 안보의 이름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이러저러한 비판을 일축시킬 수는 없다. 주권 국가답지 않게 전시작전권의 환수도 미루고, 고위공직엔 석연치 않은 이유의 군면제자가 포진해 있고,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로 관련 기업들은 내뿜개치고, 각자도생의 분위기가 팽배해진 상황에서, 국민을 탓하거나 가르치려는 것은 전후가 바뀐 것이다.

행위는 쌓여 구조를 놓고, 구조는 관성이 생겨 우리의 판단과 선택을 제약한다. 돌아보면 늘 변화의 시간은 있었다. 다만 시간은 마냥 기다리지는 않는다. 독일과 일본이 2차대전 패전의 망에서 벗어나는 동안, 우리는 고작 전쟁 대결의 냉전시대로 돌아간단 말인가.

사드의 효용성, 비용 부담 등 모르는 게 많다. 소모적 군비 경쟁의 악순환도 걱정이다. 사드 한반도 배치를 기정사실화하지 말고 국회에서 그 타당성을 논의해야 한다. 전쟁 우리의 국익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NGO 칼럼

기후변화와 식량위기, 밥상이 문제다



조 길 예
전남대 목문과 교수

환경운동의 큰스승이라 불리는 래스터 브라운은 몇 년 전 ‘벼랑 끝에 선 지구’라는 책을 펴냈다. 다가를 식량위기에 대한 전망과 경고를 담고 있는 책이다. 그가 식량위기의 첫 번째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증가하고 있는 인구수이다. 세계 인구는 매일 22만명 가까이 증가하여, 2050년에는 9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기온 상승, 물 부족, 토양건강성 악화로 인해 더 이상 식량증산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가 지적한 두 번째 원인은 육류소비

의 증가이다.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료용 곡물 7~14kg이 필요하다. 따라서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 확산될수록 식량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 책은 과거 인류 역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식량위기가 인류문명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 밖에도 육식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점 때문에도 최근 환경운동 및 정책의 주요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곧 90억이 되는 인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육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유엔의 환경 문제를 총괄하는 기구인 UNEP 자료에 따르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인이 “육류와 유제품을 멀리하는 식사”로 식단을 바꾸야 한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육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채식을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곡물이 필요하다. 따라서 육식하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사료를 생산하는 경작지 확보를 위해 숲과 원시림이 파괴되게 된

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햄버거 하나를 생산하는 데 1.5평의 숲이 사라진다고 한다. 또 대가 중의 온실가스 절반을 흡수하는 바다생태계 역시 축산분뇨로 인해 급속히 오염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물 부족의 주요 원인도 축산업이다. 예상과 달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용수는 전체의 10%에 불과한 반면, 축산업에 소요되는 물의 양은 전체 용수의 50%에 이른다고 한다. 햄버거 하나를 생산하는데 드는 물로 52호나 샤워를 할 수 있다니, 축산업이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물 확보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요인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육류 섭취량은 137g이라고 한다. 그런데 유럽연합에서 지원하는 옥스퍼드 연구결과 100g 이상의 육류를 섭취하면 매일 7.16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반면, 완전채식을 하면 2.89kg만 배출한다고 한다.

만약에 광주시민이 1년간 채식을 한다

면 무려 233만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으며, 1주일에 한 번만 채식을 해도 23만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는 2015년 광주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3분의 1을 넘는 수치이다.

기후재난이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미룰 수 없다.

지난 6월1일 광주시는 시의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리고 시민사회와 협력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를 제정, 공표했다. 조례가 목표하는 바는 기후변화와 먹을거리 선택의 연관성을 알리고, ‘주 1일 채식’을 권장하며, 실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적 지원,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가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식문화가 최근 들어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다는 점은 모두가 인지하는 사실이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식품을 통해 백세시대의 건강한 삶을 이뤄가야 할 것이다.

기 고

국민생활 깊숙이 들어오는 정부 3.0 바람



이 재 영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

개방·공유·소통·협력으로 국민행복을 여는 ‘정부 3.0’이 4년차를 맞았다.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국민중심의 정부혁신’을 모티브로, 2013년에 정부3.0 비전 이 선포되었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말처럼, 모든 공공부문이 꾸준히 노력한 결실이 이제 열리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가 국민생활 속에 어느덧 자리잡아가고 있다.

예전에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때마다 공제자료를 출력하고 공제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공제예상액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동으로 공제신고서를 채워준다. 또한 과거에는 출산을 하면 출생신고뿐만 아니라 양육수당, 출

산지원금 등 출산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당 기관에 각각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출생신고와 함께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족이 사망하였을 때도, 금융·토지·세금·자동차 등 각종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여러 기관 방문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한 번 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정부3.0을 통해 국민의 생활이 편리하게 바뀌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정부3.0 비전선포 3주년을 맞아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정부3.0 핵심성과를 총망라한 실용적인 전시·체험 콘텐츠와 재미있는 이벤트로 꾸며, 총 7만2000명의 국민이 정부3.0을 보고 만지고 느끼는 체험의 장이 되었다.

광주시는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마을교육공동체, 마을주차 등의 민관 협업모델로 전시관을 꾸몄고, 전남도는 공공산후조리원 등 지역 특유의 맞춤형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소개하여 많은 관람객의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광주·전남 지역의 맞춤형 서비스, 협업 사례가 입체적으로 시각화되어 정부3.0 우수정책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

이제 정부는 하반기부터 정부3.0의 생활 화에 더해, 각종 원스톱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참여를 활성화한다. 이와 동시에 각종 사회적 현안 해결에 정부3.0 관점을 도입해 정부3.0이 지속가능한 혁신 패러다임으로 남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도 지역 문제를 국민참여와 민관협업이라는 정부3.0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작년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가장 불편한 점’ 설문조사 1위를 차지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디자인단을 조직하고 마을주차규약, 주차개선 문화화동 등과 같이 공동체가 함께 협의하고 해결토록 추진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광주지역 내 종교단체와 협업을 통해서도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공유하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서민배려 정책 만들기’를 국민디자인 특화과제로 추진하며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아울러 광주시가 ‘공유 광주’라는 슬로건 하에, 지역 내 물건, 공간, 재능·경험,

정보 등 유·무형의 자원을 함께 나누어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원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광주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학교, 민간 등을 대상으로 회의실, 강당, 공연장, 체육시설, 잔잔감 등의 공유자원을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개방하고 있다.

지역 내 유휴공간을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샌드’로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과 함께, ‘공유광주’의 정신을 더욱 확산시키 나간다면 정부3.0의 향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3.0이 생활화되고, 거듭된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행정혁신 패러다임으로 오랫동안 남기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접점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6월,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거점지자체 공모사업에서 광주시와 광주 서구, 전남 장성군이 정부3.0 거점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정부3.0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정부3.0의 비전과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자체간 협업과 벤치마킹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본다.

社 說

원 구성 마친 지방의회 주민 권익 최우선으로

어제 우여곡절 끝에 광주시의회 의장이 선출됨에 따라 사실상 광주·전남 시·군·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시·도 의회와 기초의회 등 29곳 가운데 오늘 의장단을 뽑을 예정인 광주 남구의회만 남아 있는 상태다.

광주·전남 지방의회는 지난 4·13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으로 나뉘어 양당체제가 됐다. 시·도의장은 국민의당이 차지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더민주가 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의당 9명, 무소속 1명 등의 순이다. 부의장·상임위원장까지 두 정당이 나눠 가짐으로써 그동안 더민주 일색이어서 일사천리로 진행됐던 지방의회의정활동은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이제부터는 정파별로 의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물론 중앙 정치와 비교해 지방지치는 쟁점이거나 갈등 현안이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양당이 광주·전남에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마당에 대

선 정국까지 앞두고 있어 특정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를 따지며 대립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서 지금처럼 중앙당이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갖게 되면 의원들은 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임기 후반기여서 다음 선거를 생각해야 하는 의원들은 먼저 몸을 사리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만큼 중앙당의 예측도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관행이 계속되면 지방자치 실현은 점차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에게는 오로지 주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명의식이 요구된다. 당리당락에 따라 중앙당이 비상식적인 요구를 해 오히려다 거꾸로 소신을 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방의원들은 소속 정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긴 하지만 의정활동을 인정해 주고 표를 주는 이는 결국 유권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9급 공무원 응시 자격 ‘지역 제한’ 없어야

최근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40대 1을 기록하는 등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고 있다. 취업 준비생의 절반 이상이 이른바 ‘공시족’이며 이 가운데서 다시 절반에 가까운 45%가 9급 공무원 준비생이라고 한다. 그만큼 젊은이들이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다.

9급 공무원 시험은 거주지 제한이 없는 국가직이나 서울시와 달리 그 지역에 살고 있거나 과거 살았던 흔적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으면 응시가 가능한 지방직 시험이다. 하지만 시험 당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 정도 전에 주소지를 옮기면 지역을 바꿔 응시할 수 있다.

한데 전남 지역 9급 공무원 시험 합격점이 시·군 간에 큰 격차가 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실시된 건축직 9급 합격선만 보더라도 곡성(59점), 장흥(62점), 담양·해남(63점) 등의 하위권은 목포(87점), 화순(73점) 등과 비교하면 10점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일부 시·군에서는 90점 넘게 점수를 받고도 탈락한 경우도 나왔다. 방송통신 9급의 경우, 영암에서는 53.5점이면 합격이지만 광양시에서는 합격선이 96점이었다. 무려 42.5점의 격차다.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르면서 시·군별로 정원을 정하고 과락이 나오지 않는 한 평균점수 또는 총점이 높으면 합격시키는 현재의 임용제도 탓이다. 이처럼 시군 간 합격점의 격차 때문에 섬이 많다는 이유로 지역제한경쟁을 하는 일부 군에서는 주민등록을 이전한 외지인들이 가세해 경쟁률이 높아지기도 한다.

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고도 불합격이 된다면 이는 형평성에 분명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합격선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도·연료으로 인해 섬 지역에 대한 교통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지역 제한’을 없애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박용수의 ‘우리말 갈래사전’을 펼쳐 보면 다양한 낱씨 관련 우리말이 실려 있다. ‘가뭇더위’는 가뭄 여름의 더위를, ‘불더위’는 건조한 날씨의 몹시 심한 더위를 의미한다. ‘강더위’는 오랫동안 가뭄과 찌는 더위로, ‘강추위’는 이 안 오고 몹시 추운 추위)과 대비되는 말이다.

비를 부르는 이름도 다채롭다. 모종 하기에 알맞을 때 오는 비는 ‘모종비’, 모낼 때에 한복 오는 비는 ‘복비’라 부른다고 한다. 조금씩

내리는 비는 ‘가랑비’, 바람에 날려 흩 뿌리는 비는 ‘바람바람비’, 바람 없이 조용히 내리는 비는 ‘보슬비’, 부슬부슬(가늘고 성기게 내리는 모양) 내리는 비는 ‘부슬비’이다. 굵기에 따라 비의 이름도 다르다. ‘안개비’보다 조금 굵고 ‘이슬비’보다 가는 비를 ‘눈개’라 한다. ‘이슬비’보다 굵은 비는 ‘가랑비’(조금씩 내리는 비), 굵직하고 거세게 퍼붓는 비는 ‘작달비’, 물을 퍼붓듯 세차게 내리는 비는 ‘여우비’, 아직 우기가 있으나 한창 내리다 잠깐 그친 비는 ‘웃비’,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 곧 그치는 비는 ‘소

나기’이다. 반대로 오래도록 많이 오는 비는 ‘큰비’, 장마로 오는 비는 ‘장맛비’라 부른다.

이렇듯 낱씨 관련 우리말이 많은 것은 도시화·현대화된 요즘과 달리 이전 농경사회에서 기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컸기 때문일 것이다. 함평 출신 ‘농부철학자’ 윤구병 선생은 “기록에 기대고 상상력을 바탕 삼아 우리말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우리말로 우리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장마전선이 제주 남쪽 해상으로 밀려나 비 대신 30도를 웃도는 후텁지근한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시원하게 한바탕 소나기라도 내려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기상청은 “6월 말 시작된 장마가 이번 주말 완전히 물러가고 9월까지 대기 불안정과 기압골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상 첫 현직 검사장 구속’ 등 답답한 뉴스들만 전해지는 이때, 무더위를 식히는 한줄기 소나기같이 청량감을 안겨 주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